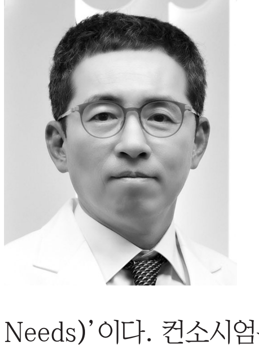
의료 인공지능·면역치료 특화 의사과학자 양성 박차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 책임 컨소시엄
보건복지부 '연구생태계 개발사업' 선정



민정준(사진)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이 연구책임자인 '전남대학교-광주과학기술원(GIST)' 컨소시엄이 보건복지부의 의사과학자 연구생태계 개발사업에 선정됐다.

7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전남대가 주관기관이 돼 구성된 이번 컨소시엄은, 의료의 미충족 난제를 인공지능과 면역치료로 극복하는 첨단 융복합 의사 과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GIST가 공동기관으로 참여했다. 올해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프로그램 명칭은 'MAXIIMUM(Medical AI-X, Immunotherapy-based Innovative Medicine for Unmet Medical Needs)'이다. 컨소시엄은 전남대 의과대학의 신진 교수, 전임의, 전공의를 미래의 의과학자로 양성하기 위해 GIST가 축적한 인공지능과 생명과학의 연구역량을 접목한다.

또 전남의대와 전남대병원은 의생명과학자들에게, 관심 연구 분야의 의학적 실무지식을 전수할 예정이다. 특히 전남대와 GIST는 공동학위제를 도입하고 최고 수준의 과학·의학적 학습 과정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의사과학자 후보자들은 스탠퍼드의대를 비롯해 피츠버그의대, 하버드의대 등의 선진 의사과학자 양성 시스템을 경험할 기회도 얻게 된다.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은 "의학과 생명과학의 폭발적 성장은 의학적 난제에 대한 과학적 해결 능력을 가진 의사와 의학적 통찰력과 지식을 갖춘 과학자를 필요로 하며 이들의 협업을 통해 신기술이 탄생하게 된다"며 "'MAXIIMUM'은 전남의대가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우리 대학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의사과학자 양성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대학과 병원이 자질을 갖춘 젊은 의사를 의사과학자로 키울 교육과 수련 시스템을 만드는데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총 9개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전남대-GIST △서울대-카이스트 △카톨릭대-포항공대를 의사과학자 연구생태계 개발사업에 최종 선정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대병원, 대장암 적정성 평가 8회 연속 1등급

중증환자 많지만 사망률 낮아
수술 사망률 평가지표 만점 등

전남대학교병원이 대장암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을 받았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011년부터 8회 연속 1등급을 획득해 전국 최고 수준의 대장암 수술 병원으로 인정받았다.

7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주기 1차 대장암 적정성 평가 결과 종합점수 90.07점으로 전체평균(86.86점)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2022년 7월~2023년 6월까지 1년간 대장암 수술과 항암화합요법·방사선치료를 한 전국 165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평원은 10개의 평가지표와 4개의 모니터링지표를 평가했으며, 전남대병원은 △전문인력 구성 여부 △수술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등이 상급종합병원 평균 점수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전남대병원은 중증환자 비율이 전체 평균은 물론 상급종합병원 평균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 중 하나인 '수술 사망률'에서 만점을 받았다. 전남대병원의 '수술 사망률' 수치는 중증환자 대비 예측 사망률보다 실제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치료의 결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대장암은 물론 위암 분야에서도 6회 연속 1등급을 받는 등 암 수술도 잘하는 병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최적화된 치료와 수술, 이후 관리까지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국민 45% "의료 개혁안 수정·보류해야"

성인남여 1000명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70% 의정갈등에 스트레스
"현상태 유지 하 해결가능성 낮아"
"'환자 최우선 한다' 믿음 없어"

의정갈등이 해를 넘기면서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국민 절반 가량은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정부가 제시한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수정 내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7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성인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수행하고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의정갈등을 의정 갈등은 '막을 수 있던 갈등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69% 였던 반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1%에 그쳤다.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전체의 과반을 넘는 54%가 의료개혁, 의사증원 정책 등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답했다.

해결 가능성을 낮게 본 응답자 540명에게 '어느 방향으로 갈 때 해결 가능성이 있으리라 보십니까?'를 추가 질문한 결과 전혀 다른 제3의 방안(38.0%), 기존 정부 방안의 수정안(35.4%) 기존 의사 단체가 제시한 방안(14.4%) 순이었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입장이 없다를 택했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해서는 전체의 45.4%는 '갈등과 문제가 있으므로 의료개혁 안을 수정하거나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7.7%는 '갈등과 문제가 있더라도 의료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갈등과 문제가 있으므로 개혁안을 전면 무효화·백지화해야 한다'의 응답은 9.9% 수준이었다.

의정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초래될 결과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는 '심각하다'는 인식은 전체의 75.5%로, '보통(22.1%)'이나 '심각하지않다(2.4%)'보다 훨씬 높았다.

지난 2월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 방안'에 대한 동의 여부에는 전체의 46.4%가 '2025년의 의대 모집 정지나 증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체의 28.8%가 의대 모집 정지나 증원 백지화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상황으로 귀하의 보건의료 정책 관련한 정부 신뢰(믿음의 수준)에 변화'를 묻는 질의에서는 정부 신뢰가 '낮아졌다' 53.8%, '변화가 없다' 37.0%, '높아졌다' 9.2%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피로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국민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전체의 70%는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한 의료개혁·의사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88.0%, 아니라는 응답은 12.0%로 나타났다.

의사의 지역·진료과별 배치 불균형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87.6%), 심각한 문제 아니다(9.4%) 순이었으며, 의사 수에 대한 평소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모자란다'가 5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적정(26.9%), 초과(6.5%)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4년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이뤄졌다. 응답 자료는 연구진이 개발한 문항을 전문 조사 업체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역·성·연령) 비례 할당 표집 방식으로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웹조사 및 모바일조사 병행으로 수집했다. 응답 자료의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3.10%이다.

뉴시스